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소득과 소비 영역의 주요 동향

박정수 (서강대학교)

- 2016년 이후 2018년까지 중산층 이상 가구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도는 큰 변화가 없고 처분가능소득 불평등도는 완화되고 있다.
- 소득계층 이동성은 중산층 가구에서 높은 편이나 최저 및 최고소득 계층은 낮은 편이다.
- 대학원졸 이상 집단의 소득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집단은 하락하고 있다.
- 최저소득계층에게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큰 수입원이고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중산층의 소비가 급감하고 의류·신발, 음식·숙박, 오락·문화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였다.
- 고소득층에서 조세부담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고 있다.
-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대한 최근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가구들이 처한 경제적 여건을 진단해 본다. 한국은 2017년 수출의 호조로 일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었지만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하게 경기가 위축되었으며 가계소득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더 나아가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외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가계의 소득과 소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를 기초로 소득계층, 연령집단, 가구주의 특성 등에 따라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 부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 자산, 부채 등의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득 공식 통계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표본가구의 약 80%가 전년도와 기준년도에 동시에 응답하고 있어 동일 가구의 소득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대상은 1인가구를 포함한 전국 전체 가구이며, 분석 기간은 자료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8년까지이다. 소비와 관련된 분석에는 통계청의 가구소비 공식통계 자료인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분기별 자료는 2020년 1분기가 존재하여 코로나19 사태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을 일부 분석하였다.

소득과 소비의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도록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과 실질소비 개념을

적용하였고,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초로 명목소득과 명목소비를 각각 실질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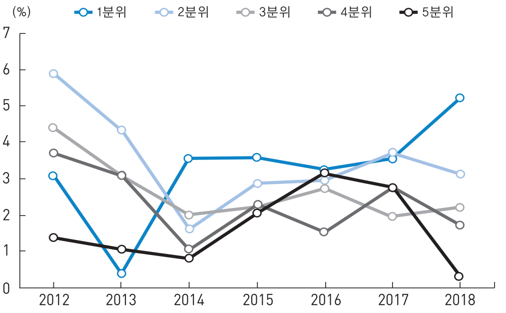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가구원들이 벌어들이는 총소득은 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삶의 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2012년 이후 금융위기의 여파로부터 점차 벗어나 2012년 2.9%에서 2015년 3.8%로 상승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서서 2016년 3.2%, 그리고 2018년에는 2.9%로 다소 감소하였다.[1)]

전체 가구를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는 5개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소득집단에 속한 가구의 소득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단, 가구원 수가 다르면 동일한 후생수준 유지에 필요한 소득도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표준화한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우선 [그림 Ⅵ-1]은 각 소득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여준다. 소득분위별 가구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소득분위별 평균소득의 실질증가율은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 가구의 소득증가율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각 소득분위를 구성하는 가구들이 점유한 소득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년도 기준 각 소득분위에 속했던 가구의 소득증가율과는 차이가 있다.

[그림 Ⅵ-1]을 보면 2014년 이후 소득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은 완만하게 상승한 반면 소득 3분위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2016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분위 가구의 2018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이유는 근로소득이 −6.7% 감소했음에도 1분위 소득의 39.6%를 차지하는 공적이전소득이 11.6%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이 부진한 이유는 사업소득이 −12.6% 감소한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림 Ⅵ-1] 가구 소득분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 2012-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각 소득분위 가구들의 평균 균등화실질소득의 전년도 대비 소득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1)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 중 2개년도 연속으로 응답한 가구들을 기초로 연도별 평균 실질소득 증가율을 구하였고, 가구가중치는 전년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소득연도 2016년 자료부터(조사연도 2017년) 소득 · 지출 항목은 행정자료로 보완한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8년간 소득계층별 소득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표 Ⅵ-1〉에는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한 각 소득분위의 소득비를 제시하였다. 소득비 산출에는 처분가능소득 기준의 균등화 소득을 사용하였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전체 평균 소득 대비 1분위 소득비는 27.8이고 5분위 소득비는 208.4이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소득 4분위 이하 가구의 소득비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 반면 고소득층인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득비가 2011년 211.5에서 2018년 205.8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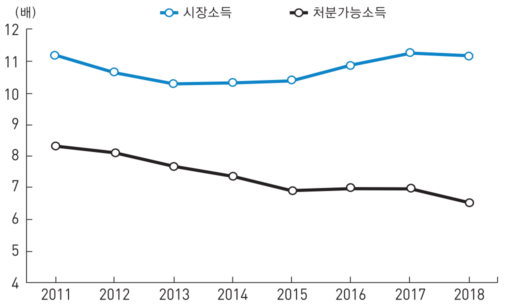
〈표 Ⅵ-1〉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비, 2011-2018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1	27.8	58.2	85.0	117.5	211.5
2012	27.4	58.7	85.9	117.6	210.5
2013	26.6	60.7	86.4	118.7	207.6
2014	27.5	60.6	87.0	118.5	206.4
2015	28.0	61.1	86.9	118.4	205.6
2016	27.7	57.8	85.5	118.7	210.3
2017	28.1	58.9	85.2	118.3	209.5
2018	29.3	59.7	86.4	118.7	205.8
2011-2018 평균	27.8	59.5	86.0	118.3	208.4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집단의 소득비임.
3) 저자 분석결과로 통계청 공식 발표 수치와 차이가 있음.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그림 Ⅵ-2]에서는 소득불평등도를 반영하는 지표인 1분위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을 제시한다. 그림에는 세전소득인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과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두 지표 간 차이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한다.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11.2배에서 2013년 10.3배로 하락하다가 그 이후 2017년 11.3배로 점차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시 2018년에는 약간 하락하여 11.2배를 기록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11년 8.3배에서 하락하여 2018년 6.5배를 기록하였다. 2016년 이후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큰 변동이 없는 반면 한국 경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어 세후소득 기준으로는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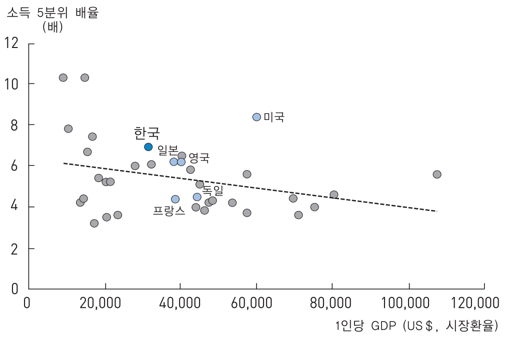
[그림 Ⅵ-2] 소득 5분위 배율, 2011-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 5분위 배율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각 연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그림 Ⅵ-3]에서는 36개 OECD 국가들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그림 Ⅵ-3] OECD 국가의 소득수준과 소득 5분위 배율, 2017



주: 1) 소득 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의 비임. 일본은 2015년 자료이고, 그 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7년 자료임.
2) 1인당 GDP는 시장환율 기준 미국 달러임.
출처: OECD, OECD.Stat(http://stats.oecd.org).

배율을 각 국가의 소득수준에 따라 비교하였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 5분위 배율이 대체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평균적으로 높으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소득 5분위 배율은 7로 소득수준에 비추어 볼 때 약간 높은 편에 속한다. 다만,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낮으면서도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국가들은 모두 동유럽 구사회주의 국가들이거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가들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가구가 얼마만큼 다른 소득계층으로 활발하게 이동하는지는 한국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고려될 수 있다. 소득계층 이동가능성은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Ⅵ-2〉는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을 나타내는 행렬을 보여준다. 각 가구의 소득분위를 2017년 기준으로 정하고 해당 가구가 2018년에 어느 소득분위로 이동했는지 그 분포를 제시하고 있다.[2] 그 결과 소득 2분위, 3분위, 4분위 가구들 중 40% 내외가 다음 해에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고 1분위와 5분위는 약 20%의 가구가 다른 분위로 이동한다. 분위별로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득계층 이동성이 관찰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Ⅵ-2〉 가구의 소득계층 이동성, 2017, 2018

(%)

		2018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7년	1분위	75.8	19.0	3.8	1.2	0.2
	2분위	14.8	57.5	21.8	5.1	0.8
	3분위	3.3	16.7	54.6	23.0	2.5
	4분위	0.8	4.5	16.7	60.5	17.4
	5분위	0.4	1.0	2.9	13.7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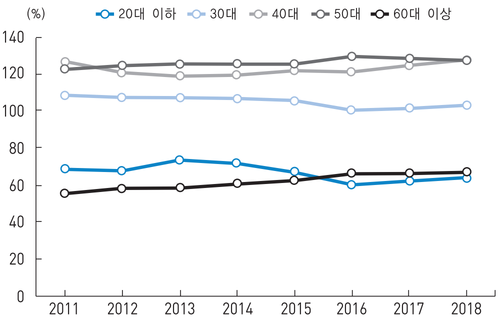
주: 1)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2017년 소득분위에서 2018년 소득분위의 이동확률을 측정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소득분위는 전년도 전체가구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소득계층 이동성 측정을 위해서는 2년 연속 자료가 존재하는 가구로 한정하였고, 전년도 기준 가구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가구주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여기서는 가구소득의 변화가 가구주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가구형태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Ⅵ-4]는 2011-2018년 동안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소득 격차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가구주의 연령집단별 소득비를 보면,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소득비가 평균 이하 수준이며 최근 20대 이하의 소득비가 하락하여 60대 이상의 소득비보다 낮아졌다. 2011-2015년 기간 동안 30대, 40대, 50대의 소득비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 2016년에서 2018년 기간에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득비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20대는 59.7에서 63.8로, 30대는 100.1에서 102.7로, 40대는 120.8에서 127.4, 그리고 60대는 65.6에서 66.5로 상승한 반면 50대는 128.9에서 127.1로 하락하였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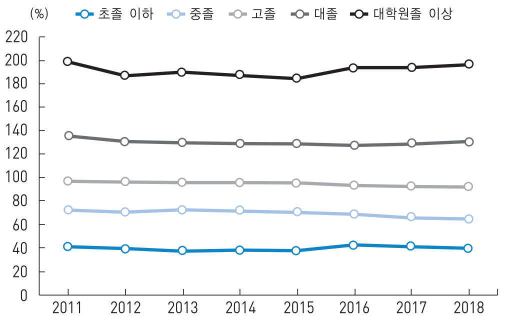
[그림 Ⅵ-4]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비, 2011-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력집단 간에는 소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림 Ⅵ-5]는 전체 평균 소득 대비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2011년과 2018년 사이에 모든 학력집단에서 소득비가 낮아졌지만, 소득비 하락폭은 학력집단마다 다르다. 이 기간 동안 초졸 이하 집단은 1.2%p 하락, 중졸 집단은 7.9%p 하락, 고졸 집단은 5.5%p 하락, 대졸 집단은 4.9%p 하락, 대학원졸 이상 집단은 2.2%p 하락하였다. 초졸 집단을 제외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비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최근 기술

[그림 Ⅵ-5] 가구주 교육수준별 소득비, 2011-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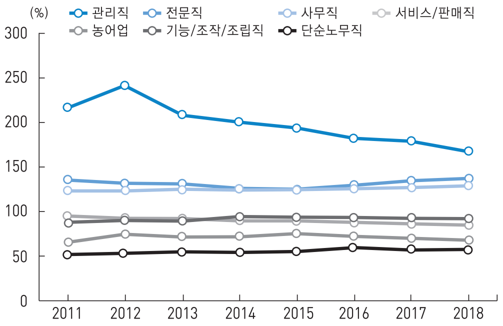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전체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연도 2016년부터 행정자료를 기초로 소득 항목을 보완하였으므로 2015년 이전 연도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변화에 따라 고학력 집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새로운 산업에서 대졸 이하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임금은 직업에 요구되는 기술적 특성과 직업에 적합한 인력의 희소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구의 소득은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림 Ⅵ-6]은 전체 평균 소득 대비 직업집단별 소득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그리고 사무직의 소득비가 나머지 직업군에 비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후 기간에 전문직과 사무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상승한 반면 관리직, 서비스 및 판매직, 농어업, 비숙련 단순노무직의 소득비는 유의하게 하락했다. 기능·조작·조립직의 소득비는 큰 변화가 없다. 전반적으로 직종 간 소득격차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Ⅵ-6] 가구주 직업별 소득비, 2011-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를 제외함.
2) 소득비는 각 연도의 대상 가구의 연평균 가구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인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소득분위별 구성 비율을 보면, 2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비율이 84.9%에 달하여 1인가구 대부분이 저소득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61.3%, 그리고 2분위에 속하는 가구 중에서 26.1%가 1인가구이므로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1인가구로 파악된다.

2011-2018년 기간 동안 1인가구의 20대와 30대 가구주 비중이 각각 9.0%, 14.2%에서 5.8%, 10.5%로 감소한 반면 60대 가구주는 50.4%에서 56.7%로 증가하여 1인가구의 비중은 고령화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다. 한편 40대, 50대 가구주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20대 가구주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3.6%에서 2018년 59.3%로 증가하여 청년층의 혼인 연령이 점차 늦춰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균등화소득 기준으로 전체 가구 평균 대비 1인가구 소득비는 2011년 66.1에서 2018년 61.4로 점차 하락하였다.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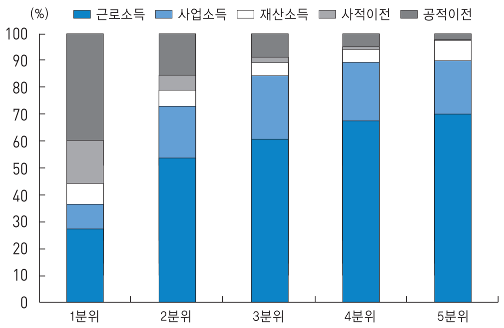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소득의 원천은 다양하고 원천별 구성도 변화해 왔다.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이전소득은 가족 간 이전과 민간연금 등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으로 구분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는 비경상소득이 수록되지 않아 여기에서는 가구소득을 경상소득 기준으로 파악한다. 2011년과 2018년 사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에서 64.9%로 다소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26.8%에서 20.2%로 감소하였다. 두 소득 비중의 합은 2018년 85.1%에 이른다. 사업소득 비중이 줄어든 이유 중의 하나는 2000년 이후 자영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줄어든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Ⅵ-7]에 제시된 2018년 기준 소득분위별 소득원천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비중은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27.3%에 불과하나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경우에는 각각 67.5%와 70.1%에 달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1년 이후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비중이 높아졌다. 사업소득 비중은 1분위를 제외하고 소득계층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 1분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적이전소득이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2011년 28.5%에서 2018년 39.6%로 늘어나 공적이전소득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 소득계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층에서 국민연금 수급대상 증가와 최근 기초노령연금 증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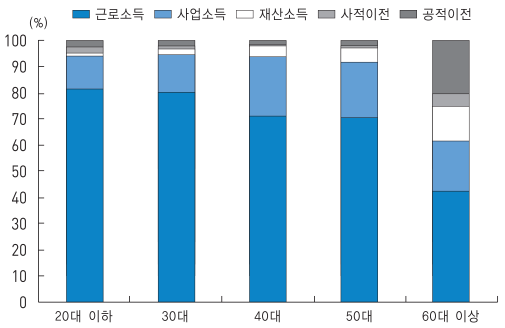
[그림 Ⅵ-8]의 2018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득원천 구성을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은 낮아진다. 20대 이하의 경우 근로소득이 81.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50대의 경우 70.4%, 그리고 60대 이상의 경우 42.1%로 그 비중이 낮아진다. 이는 고령층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사적이전소득

[그림 Ⅵ-7]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원천구성, 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9.

[그림 Ⅵ-8]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득원천구성, 2018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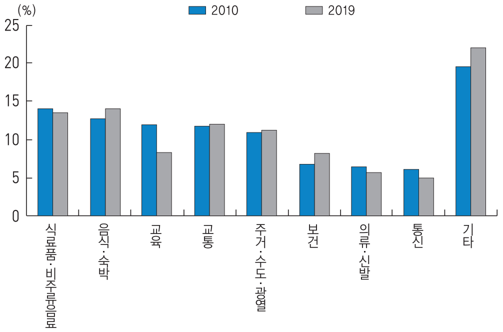
비중이 높은 편이며 60대 이상의 경우 공적이전소득이 20.5%를 차지해 고령층의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지출 구성의 변화

가구의 소비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여기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떤 항목에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그림 Ⅵ-9]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4] 2019년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수도·광열 순으로 지출이 높았고 각 항목이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0년과 2019년[5] 사이 교육 지출 비중이 12.0%에서 8.3%로 급격하게 작아진 반면에 음식·숙박 지출 비중은 12.7%에서 14.1%로, 보건 지출 비중은 6.8%에서 8.2%로 증가하였다. 교육 지출 비중이 낮아진 것은 전체 인구에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보건 지출 비중은 고령층 비중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Ⅵ-3〉에서는 2019년 기준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 구성이 제시되어 있다. 소비지출 중 의식주 지출[6] 비중은 40대가 27.3%로 가장 낮고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각각 32.0%와 37.7%

[그림 Ⅵ-9] 가구의 소비지출구성, 2010, 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0, 2019.

〈표 Ⅵ-3〉 가구주 연령집단별 소비지출구성, 2019

(%)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식료품·비주류음료	7.5	11.5	12.0	12.9	19.5
음식·숙박	19.8	15.9	14.1	14.3	10.9
교육	4.7	6.0	15.5	8.8	1.0
교통	15.2	13.7	11.4	12.4	10.4
주거·수도·광열	17.9	10.5	9.5	10.5	13.7
보건	4.4	6.4	6.2	7.9	13.9
의류·신발	6.5	6.3	5.8	5.7	4.5
통신	5.0	4.8	5.1	5.5	4.5
기타	18.9	25.0	20.6	22.0	21.7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4) 소비지출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2017년 이후 결과는 전용표본 설계,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변경, 연간통계로의 개편에 따라 2016년 이전 결과와 비교함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2019년 조사부터는 농림어가를 포함한다.
6) 의식주 지출은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등의 지출을 포함한다.

로 매우 높다. 보건 지출 비중은 60대가 13.9%로 다른 연령집단의 평균인 6.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교육 지출 비중은 대체로 학령기 자녀를 둔 40대가 15.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의식주지출 비중은 평균 30.4%였고 1분위는 43.3%로 나머지 분위에 비해서 높아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의식주지출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의 일부는 조세 또는 사회보장과 같이 소비와 상관없는 항목에 지출된다. 〈표 Ⅵ-4〉를 보면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가구소득 대비 비소비지출의 비율)은 2018년 18.8%로 2011년 17.9%에서 다소 늘었다. 그 주된 이유는 세금 및 과징금을 포함한 조세부담률이 2011년 4.4%에서 2018년 6.1%로 증가한 데 있다. 소득분위별 조세부담률은 2018년 기준 2분위가 2.0%, 3분위가 2.4%, 4분위가 3.6%, 5분위가 9.7%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률이 높아져 조세의 누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011-2018년 중 조세부담률은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변화가 없으나 고소득층인 5분위에서 6.2%에서 9.7%로 유의하게 증가하여 누진율이 강화되었다. 공적연금과 사회보장료에 대한 지출 비중은 2018년 5.8%로 2011년 이후 큰 변화가 없다.

〈표 Ⅵ-4〉 가구소득 중 비소비지출 비중, 2011, 2018

(%)

	비소비지출					
	전체	세금 및 과징금	공적 연금 및 사회 보험료	가구간 이전	비영리 단체 이전	연간 지급 이자
2011년						
전체	17.9	4.4	5.6	1.8	1.8	4.3
1분위	10.3	1.7	3.3	0.5	1.6	3.2
2분위	14.4	2.0	5.0	1.3	1.6	4.5
3분위	16.1	2.5	6.0	1.6	1.7	4.2
4분위	17.2	3.3	6.2	1.8	1.9	4.0
5분위	20.1	6.2	5.5	2.0	1.9	4.5
2018년						
전체	18.8	6.1	5.8	2.6	1.1	3.3
1분위	13.2	1.9	3.3	3.4	1.4	3.2
2분위	15.0	2.0	5.0	3.2	1.3	3.6
3분위	15.9	2.4	5.8	2.9	1.1	3.6
4분위	17.0	3.6	6.3	2.5	1.0	3.6
5분위	22.0	9.7	5.9	2.4	1.0	3.1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2012,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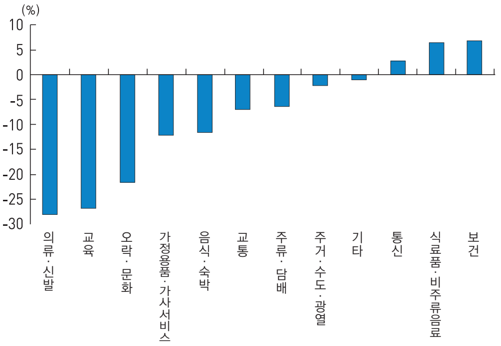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구 소비지출의 변화

2020년 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었다. 이러한 소비충격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분기별 자료를 기초로 2019년 1분기에 비해 2020년 1분기의 소비지출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7.6% 감소했다. 소득 2분위, 3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비가 각각 -9.4%, -10.2%, -11.1%로 크게 감소한 반면 1분위와 5분위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각각 -6.5%, -3.2% 감소하였다. 최저소득층은 소비수준이 낮고 필수재 위주로 소비해 온 이유로 소비를 줄일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소득층은 음식·숙박, 오락·문

화 등의 지출이 감소한 반면 교통, 음식료 등의 소비가 크게 증가해 항목간 대체소비를 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유로 총소비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Ⅵ-10]은 소비항목별 지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류·신발은 –28.0%, 교육은 –26.8%, 오락·문화는 –21.6%, 가정용품은 –12.3% 등으로 대면서비스업과 밀접한 항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는 6.4%, 보건은 6.8% 증가했는데, 이는 비접촉문화의 확산에 따른 온라인쇼핑 증가와 위생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Ⅵ-10] 소비지출의 항목별 변화율, 2019년 1분기–2020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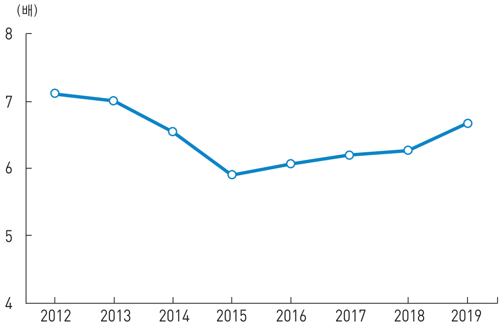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19, 2020.

가구자산의 변화

마지막으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았다. 2019년 현재 전체 가구의 63.8%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2012년 65.2%에서 감소하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가구의 비율이 높은데, 2019년 1분위의 경우 이 비율이 33.2%에 불과하지만 5분위의 경우에는 78.5%에 이른다. 이는 경제력에 따른 금융 접근성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과 4분위와 5분위의 부채가 각각 전체 부채의 24.9%와 44.8%를 차지하고 있어 부채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전체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전체 평균 135.7%이며, 1분위 145.8%, 2분위 137.1%인 반면 5분위 128.8%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은 평균적으로 20.2%이며 대부분의 소득층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림 Ⅵ-11] 순자산 5분위 배율, 2012–2019



주: 1)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012–2019년 기간 동안 31.3%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30.5%와 42.9% 증

가한 반면 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 순자산은 각각 34.7%와 22.5% 증가에 그쳤다.[7] 전체 순자산에서 소득계층별 순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결과, 1분위는 6.5%이고 5분위는 43.6%이다. [그림 Ⅵ-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간 순자산 배율은 2012년 7.1배에서 2015년 5.9배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2016년 6.1배에서 2019년 6.7배까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2012년 이후 소득불평등이 꾸준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와 대비되는 결과로 최근 몇 년간 자산가격 상승이 각 소득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7)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자료(소득분위 등)는 2017년부터 행정자료로 보완했기 때문에 조사자료로만 작성된 2016년 이전 자료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